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5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5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8월 18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효정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5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국토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충전시설 의무대상 강화
 대전광역시,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례 개정

13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발표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시 주차종합계획' 마련 및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 2030 마을건강센터 중장기 비전 선포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최종 승인

1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국토부,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시행
 국토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행안부,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행안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에 16개 지자체 선정
 환경부, 그린캠퍼스 조성에 3년간 총 18억 원 지원 협약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항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역사·문화 중심공간 '광화문광장' 재개장
 서울특별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완료
 부산광역시, 골목길 관광자원화 대상지로 영도구 '봉산마을 마실길' 선정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확산을 위한 'Happy챌린지'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 '2022년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 완료
 대전광역시,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주소기반 자율주행 주차 시범사업' 추진
 충청북도, '2022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선정
 충청남도, 공주시 '안심 더하고 행복 나누는 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전라북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완료
 전라남도, '남도고택' 활용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경상북도,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6개지구 선정
 경상남도, 공공건축정책 실사용자와 사업추진담당자 대상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21개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40

대구광역시, '스마트 가로수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확보
 대전광역시,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 사업 선정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을 활용한 대부서비스 개시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7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7.06.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원 민간위원(총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①도시분과, ②건축분과, ③주택·토지분과, ④모빌리티·물류분과, ⑤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로 구성되며,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과제명		과제명	
1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교통)	5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도시)
2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물류)	6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건축)
3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항공)	7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4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철도)	8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건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7.06.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②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내용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선 * ZEB(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 →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 → 30%로 상향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 시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 간소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 감소 -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 -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등

국토교통부 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간정보제도과. 2022.07.1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진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7.18.

도시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년 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내용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버스유형 규정 (시행령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됨 *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 -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운행 시,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시행규칙 제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 가능함 -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 -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
기타 제도 개선 (시행령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함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택정비과, 국토정책과. 2022.07.1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22.2.3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부대·복리시설의 가격 포함)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7천만 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 원 초과 ~ 1억1천만 원 이하	(1,200만 원 + 9천만 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 원 초과	(2,000만 원 + 1억1천만 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기본법」 개정(22.2.3 공포, 8.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법령시행에 따라 초광역권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 (내용)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기반시설, 산업발전 관련 사항 등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공간정책과. 2022.07.12.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행정안전부는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내용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 인정
간판 수량 산정 시 디지털 공유간판 제외	- 전통시장 등에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 인정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 전기 사용 광고 허용	-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나,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금지 예외 인정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 상업광고 허용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	- 항공기에는 본체 옆면 1/2 이내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하나, 광고 기술(래핑) 발전을 고려, 항공기의 상업광고 포함 전면광고 허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표시기간 자율화	-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15일 이내)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 제도화	- 자치단체 경계에는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는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표시 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 포함
정당 현수막 관련 위임사항(표시방법 및 기간) 구체화	- 정당 현수막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고, 14일 이내로 표시하며, 표지 신청 절차는 행안부장관이 정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시설계획과. 2022.07.1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 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하고,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7월 11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은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에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과 ‘필수 의료시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 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말함.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 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기후대기과. 2022.07.05.

도시
정책

환경

부산광역시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준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기후위기가 직면한 현 상황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보다 열 사람의 발걸음이 더 효과가 크다”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로의 부산을 꼭 이루어 시민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충전시설 의무대상 강화

기후대기과. 2022.07.06.

국도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종류(급속, 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근희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시행

건설도로과. 2022.07.02.



대전광역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 상점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대전광역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서는 최대한시간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례 개정

도시계획재생과. 2022.07.1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14.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시행)」 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함.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사유는 기존 민간조합 방식이 잦은 분쟁을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용적률 혜택 중 일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예시) 공공재개발사업 시 2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용적률[250%]×120 =300%,
그 차이 [300%-250% =50%]의 50%인 25%를 임대주택 공급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도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발표

기술정책과. 2022.07.20.

건축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3대 중점과제, 10개 기본과제, 46개 세부과제

이원재 1차관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 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중점과제 및 주요내용】

중점과제	주요 내용
건설산업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도로(22.下), 철도·건축(23))하고,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약 1,079개)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 향상 -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마련 등) 및 전문인력 양성(年 약 600~800명) 추진
생산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토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OSC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23: 1,000호)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입주기업 36→57개), 터키 등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기획과. 2022.07.11.

건축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2~'26)'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 중 대형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제1차 계획에 이어 이번 2차 조성계획에서는 2050년 서울의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로 5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2차 조성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녹색건축 90% 보급, ▲온실가스 42% 감축(18년 대비), ▲315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녹색건축 100% 보급, ▲온실가스 82%(18년 대비), ▲1,016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전략 및 주요내용]

주요 전략	주요 내용
신축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 계획,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 검토
기존 건축물 성능 보강	-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 지속 확대
녹색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 설계 단계(전문 인증기관 검토)부터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마련), 준공(건축물 관리대장 개선) 이후 운영 중 정기 점검까지 데이터 전산화 등 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
녹색건축 자금 조성	-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 확대, 제도의 실효성 확대하는데 활용될 예정
녹색건축 교육자료 배포	- 만화형태로 제작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부산광역시, '부산시 주차종합계획' 마련 및 본격 추진

공공교통정책과. 2022.07.11.

도시
정책

환경

부산광역시는 날로 악화되고 극심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4년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분야별 장기 구상을 담은 '부산시 주차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의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장 확보율은 69%에 불과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은 지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구역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총 1,995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중점 실천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단독,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개선지구 67곳의 주차난 해소,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 주차종합계획' 핵심과제 및 주요내용]

핵심과제	주요 내용
주차장 공급 지속확대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전통시장 주차공간 우선 공급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편하고 쉬비게 찾아가는 주차시스템 구축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주차 서비스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통한 민원해소

부산광역시, 2030 마을건강센터 중장기 비전 선포

건강정책과. 2022.07.2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15분 도시 생활권 내에서 건강하게, 이웃들과 함께 고립감 없는 건강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마을건강센터(현재 부산시내 17곳)를 205개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전문가 회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을건강센터의 지향점과 방향성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목표로 ▲마을 건강수준 향상, ▲지역 내 건강 격차 완화,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전망이다.

['2030 마을건강센터 중장기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마을건강 생태계를 구성	① 마을 건강거버넌스 구축 ② 주민건강 자치활동 활성화 ③ 마을건강센터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표준 운영지침 마련 ④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바탕으로 마을건강 사업 지원체계 강화
주민자치 지향 건강공동체 활성화	⑤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주민역량 강화 ⑥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을건강계획 수립 ⑦ 건강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⑧ 마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건강관리 실천	⑨ 주민 건강관리군을 구분·등록해 일상적 건강관리 제공 ⑩ 건강위험군 주민을 발굴해 건강안전망 구축 ⑪ 자조 모임을 통해 통합돌봄 제공 ⑫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강사례 관리 운영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최종 승인

신도시활성화. 2022.07.3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공원 내 여가 및 휴양시설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패밀리파크 계획 등을 담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5차)’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경상북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장치 등 장비를 모아 클라우드 외부에서 서버를 만들어 저장하는 서비스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약 8,000㎡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시범운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패밀리파크 공원조성은 1단계 신도시 내 부족한 여가 및 휴양시설을 중앙호수공원과 인접한 근린공원 내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 파크골프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원은 신도시 2단계 준공에 앞서 주민들이 조기에 이용하기 위해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해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신도시 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추후 변경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련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패밀리파크 공원의 조기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국토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산업입지정책과. 2022.07.0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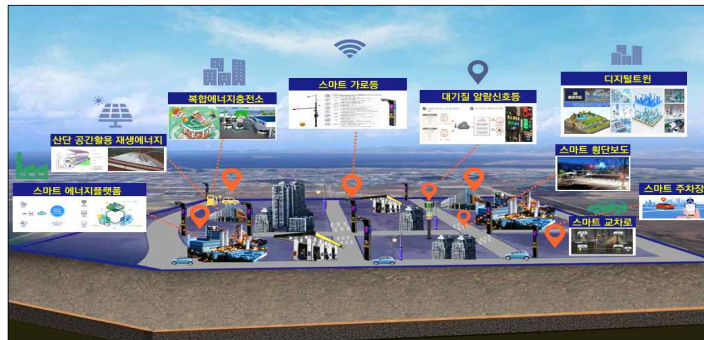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 개정(‘20.12)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21.12)」을 고시하여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하였다.

*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의, 시범산단 지정 근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특례 등

새만금개발청에서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 비전 선포(20.12) 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 시범산단 지정을 요청(21.12)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6.16~22)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최초 지정하게 되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개념]

국토부,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시행

지역정책과. 2022.07.1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모(7.4~10.31)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2곳을 선정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투자선도지구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

공모 대상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역 특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등을 결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에 민간 투자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밀도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공의 전문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역개발 성공을 견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강소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나가는 한편,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

도시정비정책과. 2022.07.2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22.1월) 및 토론회(22.6월)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 기존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혁신지구)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한다.

둘째,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히 추진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한다.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지역일자리경제과. 2022.07.26.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되었다.

*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안전개선과. 2022.07.1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에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도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 원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7.12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13 부산 13개소)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에 16개 지자체 선정

생활공간정책과. 2022.07.14.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16개 지자체 사업은 탄소중립 교육·체험을 위한 실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풀뿌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커뮤니티)를 조성·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6곳(서울 도봉구, 광주 서구, 경기 양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거점 조성사업 7곳(인천 부평구, 세종시, 경기 의정부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해남군)
- 관광자원을 연계한 탄소중립 체험 및 공동체(커뮤니티) 조성사업 3곳(강원도 삼척시의 풍곡마을(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경남 창원시의 마산합포구 창포마을(잘피숲, 편백숲), 경남 하동군의 탄소 없는 마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6개 사업에 대해 재정 특전(인센티브 4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그린캠퍼스 조성에 3년간 총 18억 원 지원 협약

신기후체제대응팀. 2022.07.04.

국토
정책

환경

환경부와 환경보건협회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2022~2024년)’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 한신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ISO 14001*)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

환경보건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항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주거정비과. 2022.07.10.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항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항빌라 재건축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항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인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항빌라 재건축사업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신항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역사·문화 중심공간 '광화문광장' 재개장

광화문광장기획반. 2022.07.18.



대한민국 역사·문화 중심공간인 '광화문광장'이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 같은 광장으로 재탄생, 다음 달 6일(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광화문광장'은 기존보다 2배 넘게 넓어지고, 광장 면적의 1/4이 푸른 녹지로 채워진다. 광장 곳곳에 자리한 5,000그루의 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도심 풍경을 다채롭게 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성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21.06)」에 따라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는 시민 품으로 돌아올 '광화문광장'의 변화를 ①재미요소를 더한 수경·휴게공간 ②육조거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발굴 문화재 현장 전시 ③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더한 즐길거리 ④광장 주변과 연계한 문화야경 콘텐츠 등 크게 4가지로 소개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광장 사용을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잔디영역, 2,492㎡),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정했다.



서울특별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완료

도로계획과, 2022.07.20.

국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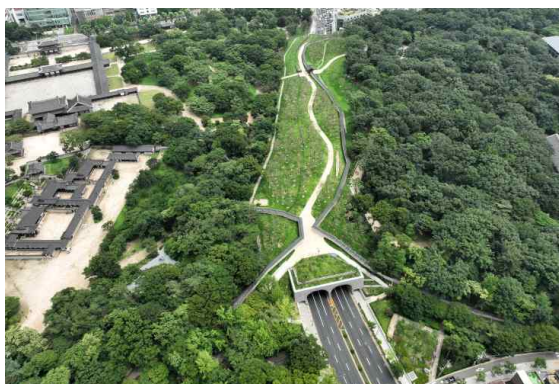
환경

서울특별시는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연결했다.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보다 넓은 녹지(약 8,000㎡)를 만들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이었다. 일제가 없애버린 창경궁과 종묘 사이 궁궐담장(503m)과 북신문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궁궐담장의 경우 공사 중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했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①일제가 허문 궁궐담장(503m)을 선형 그대로 복원하고 ②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약 8,000㎡의 녹지대로 연결하고 ③담장을 따라 창경궁을 바라볼 수 있는 궁궐담장길(340m)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됐다.

복원된 궁궐담장을 따라 조선왕실의 발자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길이 340m, 폭 3m의 ‘궁궐담장길’(돈화문~원남동사거리)도 새로 생겼다. 보행약자도 편리하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됐으며, 원남동사거리에는 산책로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복원된 담장 녹지와 새로 조성한 궁궐담장길은 22일(금)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 역사복원은 과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일제의 율곡로 개설로 섬처럼 분리돼버린 종묘를 선조들이 계획하고 건설했던 공간으로 되돌려 조선의 궁궐과 국가상징물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회복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준공 모습]

부산광역시, 골목길 관광자원화 대상지로 영도구 ‘봉산마을 마실길’ 선정

관광진흥과. 2022.07.06.

도시
정책

문화
관광

부산광역시는 대표적인 지역 관광지 육성을 위한 ‘2022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봉산마을 마실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 예술, 자원, 이야기 등 부산만의 고유성을 지닌 골목길 이야기를 찾아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하고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선정된 영도구 ‘봉산마을 마실길’은 서민의 삶의 정취가 남아 있지만, 최근 빈집 증가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다. 이런 봉산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도시재생 프로그램 ‘빈집줄게 살러올래(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를 통해 마을에 정착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봉산마을센터, 블루베리농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골목 거점 시설과 골목길을 활용한 마을리조트를 지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앵커기관(추진기관)인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업적협동조합’은 토박이 골목상권과 입주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의체를 구축해 이번 사업에서 ▲프로포즈 이벤트 패키지(선상 프로포즈, 앨범 제작 등), ▲마을골목 정원 가드닝(정원, 텃밭 조성), ▲체험 프로그램(블루베리, 도자기 등), ▲Made in 봉산(나무보트, 생활가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봉산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봉산마을 전경]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확산을 위한 'Happy챌린지' 본격 추진

도시계획과, 2022.07.17.



부산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리빙랩* 성격의 15분 도시 확산 모델 사업으로 'Happy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리빙랩: 생활 실험실, 생활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Happy챌린지'는 그동안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과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으로 완성한 '15분 도시, 부산'의 가치와 철학을 시가 지난 2002년 이후 축적해온 도시재생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마중물' 프로젝트다.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 전역의 6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5개 대표 생활권을 선정해 1개 권역별 300억 원씩 총 1,5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액은 지난해부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15분 도시 전략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생활권별로 투입되는 300억 원은 각 대표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①접근성 개선사업, ②연대성 강화사업, ③생태성 복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돌봄·청년 등 분산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저활용 민관 공유시설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15분 생활권 맵(지도)을 제작·보급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접근성·연대성·생태성 등을 생활권 지수로 관리하고, 이를 지속 수정·보완해 생활권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Happy 챌린지'의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접근성 개선사업	▲신노년의 사회적 참여 등을 위한 HA-HA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생활체육시설, ▲도심 속 갈매길 등 공간 조성 사업 등
연대성 강화사업	일상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이 공간이 주민들의 자발적 소통과 교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인 부산형 타임뱅크 등
생태성 복원사업	▲완충·연결녹지를 활용한 그린카펫(선형공원), ▲학교 및 공공기관 등 활용도가 낮은 민·관 시설 개방·공유, ▲탄소발자국, ▲공유자전거 등

대구광역시, '2022년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 완료

산림녹지과. 2022.07.07.

건축
정책

환경

대구광역시는 계성중, 신명고, 대구동곡초등학교 3개소에 '2022년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은 교내에 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권 주민들에게도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3개 학교에 3,014㎡의 학교숲을 조성했다.

올해로 개교 120주년을 맞는 신명고와 인근 계성중에 조성된 학교숲은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계산성당, 3·1 만세운동길 등 근대문화 골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달성군 대구동곡초등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설계단계에서 학교숲 명칭 공모로 '행복가람숲'이란 이름으로 조성돼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9개소 면적 24,500㎡의 학교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계속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곡초등학교 '행복가람숲']

대전광역시,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소상공인과. 2022.07.1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대전광역시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에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6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비가림(아케이드) 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배달센터 등 상권기능을 개선하는 기반시설분야,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분야, ▲관광거리, 공간조성, 특성화 기반시설 및 특화사업 콘텐츠개발 용역비 등 특화시설분야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지역 특성화 콘텐츠 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등 골목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한도 및 자격	지원조건
시설현대화사업 (2023년)	상인, 고객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자본보조 403-01) - 기반시설, 안전시설, 특화시설	5,000백만 원 이내 / 전통시장법 2조	■ 시비: 75~85% ■ 구비: 15~20% ■ 자부담: 10%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2022년)	골목콘텐츠,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역량강화 컨설팅 등 (경상보조 308-01) - 골목테마개발, 컨설팅사업 등	600백만 원 이내 / 상인 30인 이상	■ 시비: 70% ■ 구비: 30% ■ 자부담: 10% (자부담 시 우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시설 현대화	기반 시설	- 도로,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공동배달센터 등 상권기능 개선시설 ※ 공동배달센터: 리모델링비, 냉장·보관·포장설비, 시스템구축 등
	안전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의무적 예산편성 및 우선지원 대상으로 적극 지원 신청
	특화 시설	- 특성화 기반시설(관광거리, 공간조성) 및 특화사업용역비(콘텐츠개발) 등 ※ 전통시장 등에 대한 장기적 활성화 방안 및 콘텐츠개발 용역(1단계), 사업실행(2단계) 등 단계적 추진 가능
골목상권 활성화		- 지역 특성화 콘텐츠 지원, 공동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등 - 경영혁신 협동화 마케팅, 컨설팅, 점포지도, 유통구조개선 등 테마개발 -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지원 등

세종특별자치시, ‘주소기반 자율주행 주차 시범사업’ 추진

토지정보과. 2022.07.20.

국토
정책

안전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오는 22일 협약을 맺고 내달부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발렛주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소재지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공간까지 3차원으로 확대·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주소기반 신산업모델 개발 시범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야외 주차장 주차면 자율 발렛 주차’에 이어 올해 실내 주차장 자율 발렛주차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증하려는 방식은 운전자(자율주행차)가 주차장 입구에 가서 하차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빈 주차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를 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주차장 시설물(인프라)의 주소 부여대상 유형화·기준 마련, ▲실내 측위 및 자율주행 주차 실증, ▲산업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희상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장은 “자율주행차·드론 등 스마트 혁신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하면서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모델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세종시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이에 발맞춰 선도적인 연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2022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선정

균형발전과. 2022.07.19.

국토
정책

건축
정책

충청북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재원을 활용해 미리 토지를 일괄 확보하여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고, 대금은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제도이다.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사업은 이번 국토부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선정으로 97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보상비 절감은 물론 보상기간 단축으로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사업은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사업은 지난 2021년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으나, 공공청사 부지 일부가 비정형화되어 주진입로의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충청북도 이해옥 균형발전과장은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으로 옥천군 문정 공공청사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일괄 보상으로 보상 기간도 단축되고 사업 조기 착수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충청북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충북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주시 '안심 더하고 행복 나누는 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건축도시과. 2022.07.07.



충청남도는 공주시의 '안심 더하고, 행복 나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지역협력형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공주시 중학동과 금학동의 경계지점 10만 7000㎡로, 일반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교육시설이 혼재해 있다. 이곳은 1인 가구, 여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미로형 골목길이 다수 형성돼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

충청남도와 법무부는 중학동에 상대적으로 범죄가 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 더하기를, 금학동에는 범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 나누기를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봇대에 범죄심리를 차단하는 비상벨과 안전을 위한 반사경을 설치한다. 골목 입구 등 거리 곳곳에는 밝은색 안내판을 설치해 골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는 주민 간 소통 공간이자 야간에는 길 안내 및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로고젝터와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통합형 감시카메라(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산 외에도 사업 대상지의 물리적 범죄발생 환경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전라북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완료

산림복지과. 2022.07.21.

환경

안전

전라북도는 총 4억 원을 투입해 아이들이 차도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등하굣길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녀안심 그린숲은 익산 이리백제초에서 이리마한초, 완주 청완초에서 봉서초 구간 등 2개소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익산, 김제, 부안에 각 1개소씩 조성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등 9개 학교 인근에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림청에 신청한 상태다.

전라북도 황상국 산림복지과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숲 조성 모습]

전라남도, '남도고택' 활용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과. 2022.07.13.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남도고택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고택 여행상품’을 전담할 여행사 5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도고택 여행상품’은 지난해 영암 구림마을, 영광 매간당 고택 등 종가, 고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던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종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영암 구림마을, 영광 매간당고택, 보성 이진래 고택, 강진 백운동원림, 담양 학봉종가를 대상으로 남도고택과 여행사 간 1대1 매칭을 통해 고택여행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해 모집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5개 여행사는 고택종가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특히 고택의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도고택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상품을 통해 모객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예정이다.

정창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난해 고택체험 시범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서 남도고택 가치를 재발견했다”며 “우수한 전남종가와 고택을 활용한 종가문화 확산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도고택 백운동원림 전경]

경상북도,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6개지구 선정

농촌활력과. 2022.07.04.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3년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에 선정된 전국 15개 지구(강원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6, 경남 4, 제주 1) 중 전국 최다로 포항(동해면), 김천(대항면, 중산면), 영천(화남면), 경산(자인면), 성주(초전면) 등 5개 시군(6개 지구)이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해 생활서비스 제공과 역량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부족한 보건·보육·문화·복지시설 등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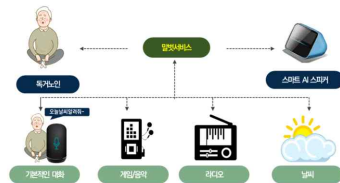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6개 면 지역에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국비 168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 원을 5년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농촌협약(1,90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275억 원) 및 기초생활거점조성(168억 원)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체감하고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다양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소외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공급·전달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가상공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으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미래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능형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스피커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상공간을 통한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소통 및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활용

- ▶ 독거노인의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AI·IoT 스피커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공공건축정책 실사용자와 사업추진담당자 대상 조사 실시

건축주택과, 2022.07.27.

건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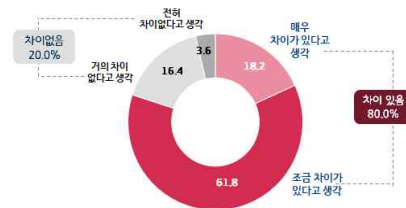
환경

경상남도는 2019년도에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와 2021년도에 설치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과 파악 및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상남도 공공건축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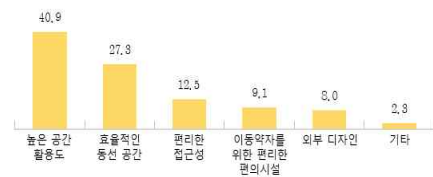
경상남도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시설의 실사용자 중 80%가 비슷한 용도의 타 시설과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차이점으로는 높은 공간 활용도 40.9%, 효율적인 동선 27.3% 등을 꼽았다.

또한 전반적인 시설의 만족도는 약 65%의 응답자가 만족(매우만족 23.6%, 만족 40.9%)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 및 시·군 사업추진담당자들은 공공건축가의 자문에 대해 85.2%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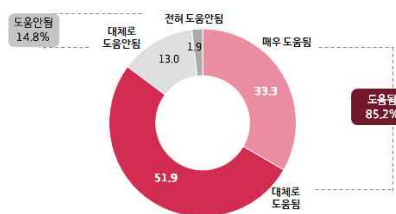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해서 도 및 시·군 사업추진담당자들은 93.3%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답했으며, 도움이 된 분야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관한 검토 50%, 건축계획의 주안점 자문 28.6%, 설계공모 절차 등에 관한 자문 21.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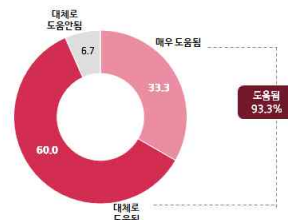
[실사용자가 느끼는 비슷한 용도의 타 시설과의 차이]



[실사용자가 느끼는 타 시설과의 차이점]



[사업추진 담당자가 생각하는 공공건축가 자문 내용 도움 정도]



[사업추진 담당자가 생각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움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21개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건축지적과. 2022.07.21.

건축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부분 온실가스 32.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사업비 103억 3,019만 원(국비 72억 3,114만 원, 도비 30억 9,905만 원)을 투입해 총 21개소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공어린이집 9개소, 보건소 12개소이며 대상사업 중 13개소가 완료됐으며 8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다. 올해는 5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분야 건축물이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대구광역시, ‘스마트 가로수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확보

산림녹지과. 2022.07.05.

환경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사업인 ‘2022년 공공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로수 생육정보 구축 사업비 국비 15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가로수의 위치정보, 수종, 규격, 수령, 뿌리 손상 상태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 (사업기간: 7월~12월 말)으로 (주)소리엔, (주)에프아이솔루션 2개 IT기업과 함께 청년인턴 66명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대구광역시 가로수 226,724그루 중 100,390그루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대구지도포털’에 등재해 시각화하거나, 별도의 스마트 가로수 트리맵(Tree-map) 구축 등 스마트 가로수 사업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목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모델 등의 적용으로 꽃가루 알림 서비스, 주거지 친환경 지수 알림 등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정책 추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은 “가로수의 상세한 생육정보 자료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도시숲(가로수) 관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 사업’ 최종 선정

토지정보과. 2022.07.12.



대전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에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과제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발표 심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8개 협력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공모에서 서구, 유성구, 카이스트,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으로 구축 비용 절감과 공간 정보 및 보행자 이동 최적경로 데이터 구축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3D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경로 측위 데이터 구축(실내 측위 및 보행자 동선 데이터 구축), ▲VR을 활용한 실감형 소방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소방안전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대피동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근로자들은 층별 특성에 맞는 대피훈련을 상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관은 최적화된 출동경로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초정밀 소방차량 위치정보가 상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수신돼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기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을 활용한 대부서비스 개시

자산관리과. 2022.07.25.



경기도가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 공유 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 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 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

07